

「산업안전 정책 · 입법 동향」

2025. 12. 1. ~ 2025. 12. 12.

분류	주요 내용
정부 주요 정책 동향	<p>▣ 고용노동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고용노동부) 고용노동부,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.1.~12.5. 공공기관 발주 현장 중심 동절기 건설현장 대상, 발주자로서의 책무 - 동절기 안전보건 수칙 집중 점검 • (고용노동부)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·공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• (고용노동부)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39개 안실단 참여기관 대상 안전문화 확산 발표회 개최 -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, '현장 안전문화 정착 사례' 대상 수상 • (고용노동부) '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' 전부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,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-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• (고용노동부)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37조 6,761억원으로 확정, "일터의 혁신"에 집중 투자할 계획 • (고용노동부) 김민석 국무총리,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- ▲노동자 참여, ▲공공부문 역할, ▲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- 【관련 국정과제】 75.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• (고용노동부) 국민과 함께하는 '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' 개막 - 김주영 의원실·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 4일(목) 공동 개최 - 중대재해 예방 위한 체험·전시 프로그램으로 국회·국민 관심 모아 • (고용노동부)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잡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• (고용노동부)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, "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" - 상시적 소통 위해 「안전한 일터 위원회」 구성, 기후·기술 변화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대응을 위해 공동 협력 • (고용노동부) 2026.1.16.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노동부,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-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은 2026. 1. 16.까지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을 통해 MSDS 제출

-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, 비공개 승인을 받아 MSDS에 대체자료 기재
- **(고용노동부)** “일터도 혁신 시대 온(ON)!”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
- 우수기업 시상·혁신사례 공유·기조강연 및 종합토론 진행
- 노사정부·전문가가 모여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전략 논의
- **(고용노동부)**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
- “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”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.

▣ 국토교통부

- **(국토교통부)**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-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자급요건 완화 및 자급금액 확대
-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, 과장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

▣ 행정안전부

- **(행정안전부)** 국가재난안전교육원, ‘2025 한국행정혁신대상’ 대상 수상
- 국경을 넘는 K-재난관리의 전파로 지구촌 안전 수준을 높여
- **(행정안전부)** 복합재난에 맞서기 위한 재난안전정책, 민·관·학·연이 함께 머리 맞댄다
-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‘2025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’ 개최(12.2.)

▣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- **(과학기술정보통신부)** AI·기상융합기술 기반 충청권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
- 과기정통부·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충청권 4개 시·도(충북, 충남, 대전, 세종)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 성과공유 및 활용·확산계획 논의

▣ 소방청

- **(소방청)**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숨은 영웅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청, 공적 포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.
- 소방청, 「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」 시상식 개최
-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, 우수 소방안전관리자와 현장소통 간담회
- **(소방청)** 소규모 지하주차장 및 리튬전지공장 소방시설 기준 강화·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
- 소규모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 의무화 및 리튬 전지공장 시각경보장치 설치
- 화재 취약시설 안전기준은 ‘높이고’, 불합리한 규제는 ‘낮춰’
- **(소방청)** 소방청,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·공유
- 선제적·창의적 안전관리 업무 도입 등 적극적 업무 추진 우수사례 발굴
-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, 포스코 포항제철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

▣ 인사혁신처

- **(인사혁신처)** “공무원 재해예방, 조직 차원 관심·지원 필요”
-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위한 협력 강화..「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」개최

▣ 지식재산처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지식재산처) 안전한 나라를 위한 올해 최고의 아이디어는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」 우수 발명품 전시 및 시상식 개최 - 대상 '도로 중앙분리대 횡단용 이동식거치대' 등 24건 수상작 선정 	<p>▣ 공정거래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정거래위원회) 2025년도 16개 업종 표준화도급계약서 제·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급업 및 2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 신규 제정 -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59개 전(全) 분야 대폭 반영 <p>▣ 국민권익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국민권익위원회) “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”…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행심위,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·부당하다고 재결 • (국민권익위원회) “학교 갈 때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 대요”… 학생 불편 없도록 안전 시설물 설치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권익위, 과천주암지구 내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‘합의’ <p>▣ 관계부처합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관계부처합동) 정부, 고층건축물 ‘간접 화재안전 대책’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고층건축물(30층 이상) 6,503개동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- 특히, 법 개정*이전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동 집중관리 - *(건축법령 개정 '12.3.) 고층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 의무화
주요 입법 동향	<p><법률 발의 및 제출안></p> <p>▣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입법예고중, ~12. 19.)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대재해 우려 상황까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(안 제55조) • (입법예고중, ~12. 18.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대재해 판단 범위에 업무상 질병 유발 사고를 포함하여 기준 명확화(안 제37조제1항) • (입법예고중, ~12. 18.)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로 실질적 권리 보장(안 제51조·제52조·제169조) • (입법예고중, ~12. 16.)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폭염·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,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한 등록 말소·취소 요청 근거 마련(안 제70조·안 제159조제2항) • (입법예고중, ~12. 16.)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업중지명령 대상 '중대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'까지 확대(안 제

55조의2 신설)

- **(입법예고중, ~12. 15.)**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 -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대표·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(안 제52조제1항·제2항·제4항)
- **(입법예고중, ~12. 15.)**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 -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사용대상에 추가(안 제4조의3제2항·제12조제3호 신설)
- **(분회의심의(수정가결, 12. 10.))**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)
 - 미지급 보험급여와 유족급여의 상속 가능 여부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, 사업주의 보험급여 정보 제공 의무와 공단 재해조사에 재해당사자 참여 보장(안 제81조제3항·제116조제2항 등)
- **(분회의심의(수정가결, 12. 10.))**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)
 -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, 위험성평가 이행력 강화, 재해조사 확대 및 알권리 보장, 안전보건공시 의무 도입
- **(입법예고중, ~12. 24.)**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1인)
 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확대하고, 노사 합의를 통해 필요한 안전조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2조)
- **(입법예고중, ~12. 24.)**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 - 중대 사망사고(1년 3명 이상) 발생 시 최대 영업이익 5% 또는 3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강화(안 제 161조의2 신설)

▣ 국토교통위원회

- **(입법예고중, ~12. 19.)**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(윤종오의원 등 14인)
 - 발주 단계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, 공기·공사비의 안전 연계 조정 근거 마련,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확산 및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 도입(건설안전특별법 제정)
- **(입법예고중, ~12. 19.)**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(윤종오의원 등 14인)
 -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기·공사비를 의무화하고 발주자의 안전책임 강화, 시공자·하수급자에게 단계별 안전의무 명확화

▣ 행정안전위원회

- **(분회의심의(수정가결, 12. 3.))**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회)
 -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도 어린이놀이시설로 포함해 안전성평가를 의무화(안 제2조제2호 등)

▣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- **(분회의심의(원안가결, 12. 3.))**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	<p>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·질병·사망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의무 명확화(안 제26조제1항) <p><입법(행정) 예고 법안></p> <p>▣ 고용노동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고용노동부)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 공포(시행일: 2025. 12. 1.) - 개정이유: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·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,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• (고용노동부) 「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」 전부개정 고시(시행일: 2025. 12. 1.) - 개정이유: ①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은 폐지,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, ② 최근 개정한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23.11월) 및 「건설기술진흥법」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, ③ 보온양생 작업 중 중독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 • (고용노동부) 「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」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- 개정이유: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·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안전인증기준이 강화되는 경우, 강화된 기준 적용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 인증제품에 인증 표시 또는 인증광고를 금지하여 안전성이 강화된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(의견제출: 2025. 12. 12. 18:00까지) <p>▣ 국토교통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국토교통부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 개정이유: 대형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, 지자체·공공기관이 중앙위원회 등의 설계심의위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며, 기타공공기관·국책연구소 전문가까지 위원 위촉 범위를 넓혀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(의견제출: 2025. 12. 29. 까지)
정부 및 유관기관 행사 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안전보건공단)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」 워크숍 및 '26년 사업설명회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, 장소: 2025.12.16.(화) 13:00~17:00, 대전선사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홀 • (민주노총) 작업중지권·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민주노총 등 2만1천13명 선언 국회 전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“죽지 않고 일할 권리·국회가 즉각 입법하라” • (안전보건공단) 제3회 「스마트 안전장비 선정위원회」 결과 알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품목추천 대상: 안전관리 스마트글라스시스템 • (양형위원회)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「중대재해 처벌과 양형」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, 장소: 2025. 12. 15.(월) 14:00 ~ 18:00, 대법원 1층 대강당 - 주제: 「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와 양형기준」